

#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

(이영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4월 일

발 의 자: 이영경, 안광림, 정용한, 박주윤,  
조우현, 김장권, 김종환, 김보석,  
서희경, 김보미, 추선미  
(이상 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저출산·고령화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연결되어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추진 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3조5 별표1 에 의해 유치원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이 불가함.
- 민간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례를 일부 참고하여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하는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함.

## 3. 결의문(안): 별도 붙임

#### 4. 기타사항

- 이송기관: 대통령실, 국회, 교육부, 교육청, 국토교통부
- 붙임: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1부.

#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

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에서 학교 용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방지하고,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.

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유아교육에는 많은 변화를 맞이 했지만,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.

첫째,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에 의해 ‘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’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. 아울러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.

둘째, 지속적인 학령인구감소로 운영이 불가하여 폐원까지 한 경우에는 해당 사립유치원이 설치된 지역을 조사하여 실제로 영유아수가 급감했고, 운영상에

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맞다면 해당 시설을 고령화시대에 맞게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.

셋째, 아파트 어린이집은 국가권익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여러차례 접수되었고,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 표명한 사례가 있다.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적용받는 근거 법령 및 지위는 차이가 있지만, 저출산·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.

재산의 출처는 사인(私人)이 했지만,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정 내에 편입돼 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은 민간과 공공, 두 영역에 모두 발이 걸쳐진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. 또한, 인가받은 ‘학교’라는 공공성으로 인해 학원과 달리 여러 경제적 혜택까지 받는다. 하지만, 사적으로 인한 폐원이 아니라면 그 사유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폐원이라면 해당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여 저출산·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.

하나. 국회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해서는  
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 
추진하라

하나. 교육부는 ‘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’에서 계획되어있는  
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강구하라

2024. 4. .

성남시의회 의원 일동